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김동춘

1. 머리말

90년대 초 정도까지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담론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민족’은 역사의 퇴물, 시대와 맞지 않은 낡은 구호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90년대 들어서 ‘민족’은 ‘계급’과 동반 퇴조하였는데, 그것은 대체로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혹은 비정부기구(NGO)의 활성화와 궤도를 같이한다.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민운동 혹은 시민단체는 계급 혹은 민족과 같은 고도로 추상적 공동체나 이론적·운동론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 법의 지배, 자율성, 시민참여 등에 방점을 두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물결은 현실사회주의와 제3세계 민족주의의 동시적 후퇴 그리고 지구적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적 분위기의 산물이며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NGO의 등장이라는 것도 이러한 국가, 민족, 공동체, 제3세계 등의 범주를 낡은 것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¹⁾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개인주의

1) 데이비드 리프, 『시민사회의 가짜새벽』, 조효제 편, 『NGO의 시대』, 창작과비평, 2000, 103쪽.

부활과 맞물려 있다.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이분법, 통일이라는 당위적 목표보다 시민의식·시민운동·인권 담론이 유행처럼 되면서, 이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파시즘, 집단주의 혹은 퇴영적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²⁾ 한국에서도 반외세, 통일 등 ‘민족’의 자주성을 기초로 하는 운동들은 이제 ‘시민운동’과 분리되었으며, 또 시민운동이 그러한 추상적이고 ‘넓은 민족주의’에 집착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시민의 구체적인 권리, 제도 내적 개혁 혹은 생활상의 문제를 접근하는 한도 내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신경제’하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퇴출의 위기에 몰린 대다수의 ‘시민’들, 특히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부시정권의 새로운 자국 중심주의적 패권주의 전략과 자국 산업보호의 무역정책은 국가 혹은 민족 단위의 자기방어의 필요성을 드높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구화된 정치경제질서는 중국처럼 산업화를 추진하는 후발국가는 물론 한국 같은 중위의 자본주의 국가에도 여전히 국가 혹은 민족 공동체의 의미에 관해 중요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는 WTO체제,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질서(globalization),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과 같은 일련의 급박한 정치·군사적 도전 속에서 한국의 시민, 시민운동은 현실적 공동체로서 국가 혹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서 민족이라는 정치단위를 대신할 수 있는 물리적·정신적 방어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이제 민족문제에 대한

2) 비판자나 언론에 의해 다소 과장되기는 했으나 임지현의 ‘일상적 파시즘론’은 민족주의를 국가주의 혹은 파시즘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임지현 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참조).

관심을 포기하고 ‘시민’적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국가 혹은 민족 단위의 자기방어력과 생존전망을 포기하고 미시정치(micro-politics)에 몰두함으로써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³⁾

둘째는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반도의 긴장과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민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분단된 한국상황 속에서 이제 민족/반민족의 전통적인 민족주의 혹은 민족자주성 노선은 ‘시민적 이슈’ 밖에 존재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2. 지구적 신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담론

민족주의(nationalism)가 민족(nation)을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있지만,⁴⁾ 원래 유럽 근대국가의 태동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민족 혹은 민족국가(nation-state)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개인이 신분적 질곡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기결정권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논리적으로 가족·지역·계급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서 존재한다. 물론 개별국가의 주권(sovereignty)으로서 대내외적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관념은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관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민족국가라는 정치단위 내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흩어져 있는 부족·종족·지역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내로 통합해 내고, 그들에게 하나의 국민 혹은 시민의 자격을 부여한다.

-
- 3) 중국과 미국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담론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 자본의 침투를 위한 공격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미국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인권침해세력을 보호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의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내부의 억압과 성적 차별을 자행하는 탈레반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 4) 겔너는 “민족주의가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족을 발명해 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 Gellner,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71, p. 169).

근대화의 길로서 시민권의 획득이 일정한 폐쇄성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면 단선적인 발전경로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민족·국가의 일체성은 현실정치, 특히 후발국가의 현실정치 속에서는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본주의는 세계체제로 존재하였으며, 국가 대 국가 간에 대립과 전쟁, 억압과 지배가 발생하였다. 시장경제는 독점·국가개입·파시즘에 의해 굴절되었으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되었다. 폴라니(Polanyi)가 말한 ‘사회의 자기방어’로서 노조운동의 등장은 국가의 시장개입을 불러왔다.

제국시대 이후 침략과 전쟁이 만성화되면서 이제 민족이 ‘개인’에 대립하고, 국가가 개인에 대립하고, 민족이 국가와 대립하게 되었다. 특히 정치적 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풀 수 없었던 소속과 연대의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정체성과 연대의 수사(rhetoric)는 근대시민들이 국가권력의 문제적 성격(problematic nature of state power)을 쉽게 취급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포섭과 배제의 문제였던 것이다.⁵⁾ 따라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후발국가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졌으며, 또 전근대적 공동체 문화와 결합되어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대립하는 이념으로 정착한바 제3세계에서는 사회주의와 결합하기도 했다.

민족과 국가의 불일치, 시민과 민족의 불일치는 모두 자본주의 경제가 일국단위가 아니라 세계체제로 존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근원적으로 본다면 시장경제,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 자체의 한계 즉 상품의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인간이 공개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서구적 근대 그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붕괴와 탈냉전 이후 지구화된 경제질서는 과거 제국주의 초기

5) Craig Calhoun, *Nationalism, and Civil Society: Democracy, Diversity and Self Determination, International Sociology*, 1992~1993, p. 387~411.

단계에 그러하였듯이 이제 자본주의 세계체제하에서 정치적·경제적 시민권을 갖지 못한 종족·민족에게는 차별과 배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민족주의 혹은 인종주의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그중 일부는 근본주의(fundamentalism)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⁶⁾ 원래 과거의 민족주의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균등발전의 결과 주로 피해를 입은 국가·민족·종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적 민족주의는, 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억압이 상당한 자존심 훼손과 열등감 형성을 수반하고 내적으로는 특정 정치세력이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한 종족적 동질성과 배타성, 역사적 기억 등의 사회심리적 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발흥하였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체제하에서 제국주의 침략이나 다른 거대 패권국가의 강제적 병합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는 종족, 민족(ethnic group, nation)이 세계질서하에서의 시민권인 주권 국가(sovereign state)로 성장하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과정과 마찬가지로 억압된 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것이 구소련과 동유럽 해체 이후 구공산권이나 구제3세계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후기민족주의(post-nationalism)의 배경이다.

물론 탈냉전과 권위주의 국가의 붕괴는 시장경제와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확대가 곧 민주주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구화시대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자기방어와 자기보존의 논리로서 민족주의·인종주의는 독일 등 일부 선진자본주의와 동유럽권 구사회주의 지역, 구 유고 지역,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약화,

6) 근본주의의 뿌리는 원래 기독교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슬람 등 비기독교세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어진 교리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대화를 차단하는 자기중심주의적 태도로서 이러한 근본주의는 기든스가 말한 것처럼 전통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방식인데(기든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김현옥 옮김, 한울, 1997), 이것은 분명히 전통의 위기 혹은 지구화된 자본주의 질서하에서의 탈락자들의 정치적·문화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의 직접지배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국가 내에서 보장되었던 시민권이 상실된 데서 비롯된 하나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자유주의가 제국주의로 귀결되었듯이, '자유주의'로 포장된 시장논리의 무제한적인 확장은 그러한 자유주의 질서에서 탈락한 자들의 내적인 결속력, 즉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탈락' '배제' '좌절'의 경험을 공유한 민족구성원에게, 그들을 응고시키는 강력한 시멘트로 작용하게 되어, 민족적·인종적 일체성은 시민권의 신장,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압도하게 된다. 또 구유고의 밀로세비치처럼 이러한 민족주의 혹은 민족감정은 그 민족 내부에서 본다면 지배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동원된다.

'시민사회의 확대'라는 서방세계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후기 공산주의(post-communist)에서 잠복되어 있던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은, 지식인들의 저항이 개인적 권리의 담론에 기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에 대한 반대, 국가통제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의 추구가 시장경제 및 그에 수반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압도하였고 민족주의는 집합적 정체성을 조직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⁷⁾ 내적으로 본다면 공산정권 붕괴 이후의 '시민사회'의 담론은 결과적으로는 구공산당관료들이 신흥부르주아⁸⁾로 변신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이데올로기였다고도 볼 수 있으며, 국제 투기적 금융자본의 무차별적인 도입을 찬양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지구화는 모든 나라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한편에서 시장경제라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또 한편에서는 민족주의적인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것이다.

7) "동유럽에서 민족주의 담론이 없었다면 저항세력의 권리와 시민권의 요구는 정치적 구체성을 상실했을 것이다."(C. Joppke, "Intellectuals, Nationalism, and the Exit from Communism: The Case of East Germany,"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1995, pp. 213~41)

8) 보리스 까갈리스끼, 『근대화의 신기루』, 창작과 비평, 2000, 251쪽.

결국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주의 혹은 대안부재론은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와 공존하는 셈이다.

한편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적인 시장논리의 확대는 국가 내에서 확보되어 왔던 자유권과 사회권을 침식하거나 폐지하는 계기가 된다. 즉 그 동안의 민주화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기방어력은 대체로 국가 내에서의 법의 지배형태로 보장되어 왔던 셈인데, 이제 자본에 대한 국가의 규제력이 약화되고 초국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됨으로써 자본의 사찰(policing)은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적 대표성과 참여, 조직화와 파업의 권리 등과 같은 자유권적인 시민권은 물론 교육·복지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도 크게 약화시켰다. 이로써 불평등과 차별화가 심화되고 국가 내의 동등한 시민이라는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종주의, 소수자 민족주의, 극우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물론 시민사회 혹은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개인의 자각과 권리의식을 높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시장’으로서 시민사회, 자본의 지배력으로서의 시민사회는 확대시켰지만 토크빌(Tocqueville)적 의미의 ‘자율적 관계’ ‘결사체’(association)로서 시민사회는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 점은 바로 상당수의 선진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도 시민권에 대항하여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그리고 구공산권 국가에서는 민족·인종적 정체성의 담론이 오히려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공산권 국가에서 자유주의·‘시민사회’의 등장은 곧 조직 자원·연줄로 무장된 구관료·구정치세력, 노멘클라투라 세력의 천민적 자본축적의 ‘자유’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상황 아래서 이제 안정성과 소속감을 상실한 민중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부활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애초에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개인과 민족 혹은 시민사회와 민족이 상호 참여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3. 한국에서 ‘시민’의 등장과 ‘민족’의 후퇴

한국에서 군부정권의 퇴진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나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민주화를 진척시키고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90년대는 동유럽과 달리 탈냉전/국가권력의 약화가 곧 시민사회와 잠복된 민족주의의 동시적 부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기존의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분단된 두 국가 간 대립체제, 즉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반제민족주의의 경우, 여전히 강하게 존속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체제 위 담론의 위세 속에서 자유주의 담론에 점차 압도당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 일제 식민지배를 당하고, 해방 이후 주변 강대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분단된 수모를 겪으면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남북한에서 모두 유례 없이 강력한 민족주의를 발흥시킨 토양이 되었다. 더구나 남측의 입장에서 볼 때 북측과의 사실상의 전쟁관계에 놓여 있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군사·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정치현실이다.

80년대까지 저항세력의 민족담론은 ‘안보’를 위협하는 반(反)체제논리로 작동하였다. 그것은 반미·반체제의 논리적 기초가 되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그리고 남한이 민족적 자주성을 전지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해 파생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가설 위에서 있다. 물론 점차 주변화 되기는 했지만 80년대식의 반미/반제국주의 민족담론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승리와 북의 패배라는 실증적인 자료를 아무리 들이대도 이들이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종속적 정치현실이 엄존하기 때문이다.⁹⁾

9) 정치적 종속의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미군주둔비 분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주둔지의 환경파괴,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피해 등이 미군주둔의 정치경제적 현실로 존재하고

이러한 비타협적인 반미/반제 민족담론은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가 밑으로부터 민주주의 혁명 혹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체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축적에 의해 강화되었다. 즉 근대사를 통해서 한국은 국가와 가족 사이에 시민사회가 매개되지 않은 채 가족과 국가가 곧바로 대면하는 과정을 겪었다. 여기서 공동체인 가족관념의 확대된 형태로서의 혈연적 민족개념이 압도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개인주의와 다른 출발점에서 있으며, 바로 이것이 민족주의의 한계이자 힘이기도 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정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룬 한국은 지구화, 자본의 국제적 이동 그리고 대외 경제개방의 일정한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기업들의 동아시아 진출, 대단히 빠르게 진척된 정보화와 지식·정보 관련 피고용자 증가, 대(對)중국 무역비중 증대, 외국인노동자의 대량유입 등이 그 중요한 징후들이다. 특히 북과의 체제경쟁에서 한국이 승리하였다는 일반적인 관념은 한국의 국가를 ‘분단’국가가 아니라 자기완결적인 독립국가, 독립된 사회구성체라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남북의 경제력 경쟁에서의 남의 압도적 우위,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세계체제 내 위상변화는 한국에서 민족담론의 내용과 성격을 변화시켰다. 즉 이는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인들의 사고를 지배해 왔던 저항적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후퇴하고 민족주의가 이제 국가주의, 사회의 지배체제, 지배적 사회심리로 내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의 파시즘’론은 이러한 민족주의의 보수화를 주목하고서 저항민족주의 내에도 그 같은 요소가 잠복해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성격변화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한국자본주의가 외형적으로 팽창하고 타민족·타인종과의 교류와 접촉이 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한 90년대 들어서, 그 동안 독일과 일본 등 파시즘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발간위원회 역음,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깊은 자유, 2000) 참조.

경험을 거친 나라의 일인 양 간주했던 이 폐쇄적·배타적 자민족(국가)주의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일방적인 '피해자', 자본수입국가의 위치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심각한 이방인 차별주의 현상들이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점차 드러났다. 외국인 노동자, 재종교포나 탈북자들에 대한 냉혹한 처우와 멸시, 동남아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등이 전자에 속한다면, 한국 내 화교나 혼혈인들에 대한 냉대와 차별은 후자에 속한다.¹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단일민족'의 신화에 집착하고 혈통중심주의 사고와 행동을 견지해 왔는지 새삼 확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퇴영적 자국민중심주의는 사회 내의 연고주의·가족주의와 더불어 시민적 도덕성을 억제하는 '보수적 힘'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미국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상대적인 자율성 제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저항적 민족주의의 약화는 곧 비정치적인 시민운동의 등장과 궤도를 같이하였다. 90년대 한국의 시민운동은 80년대식 본질주의(essentialism), 혁명적인 노선과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리고 국가 내 혹은 제도적 개혁의 추구에 초점을 두으로써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¹¹⁾

시민운동은 '국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응답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추상적 정체성'의 추구에 몰두해 있던 과거 근본주의적 정치적 사회운동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주로 대중동원 방식이 아니라 법률쟁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여론형성에 비중을 두었다. 과거에는 민중/민족의 주체설정 문제가 (혁명)운동진영의 주요한 대립축이었다면, 이제 시민운동은 혁명 후 시대의 새로운 '진보'

10) 박경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1999년 가을호, 201쪽.

11) 김동춘, 「한국사회운동의 현주소」, 『황해문화』 1999년 여름호.

의 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운동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국가체제를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비판자들의 지적처럼 동유럽과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NGO 혹은 시민사회 담론 역시 자유주의 부활의 한 징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일각의 주장처럼 외국자본의 대리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¹²⁾

그러나 반미/반제 저항민족주의가 개인주의적인 시민담론에 압도당하면서 점차 밀려난 것은 단순히 한국자본주의와 지배체제의 성격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만은 아니며 저항적 민족주의 자체의 논리적·실천적 한계에 서도 기인하고 있다. 반미/반외세 통일론의 논리적 기초가 되는 저항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주적 결정권을 가장 중요시한다. 물론 정치적 결정권으로서 자주성은 국가 혹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므로 이러한 전제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제 민족담론은, ‘민족’은 하나의 정치적 상징이며 네언(T. Nairn)이 말한 것처럼 ‘보상적 충동’일 수 있다.¹³⁾ 다시 말해 민족/반민족의 대립구도는 정치·군사적 주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가 실제로 구성원인 국민 혹은 시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¹⁴⁾ 국가 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정치세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오늘의 지구자본주의는 국가 대 국가의 억압과 지배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정치·군사적 종속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현실화되어 있고 또 국가의 자원배분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 속

12)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 소액주주운동이 결국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장악을 위한 교두보 확보운동,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의 정착운동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정태인, 『위기와 개혁을 둘러싼 사회세력의 대립』, 『동향과 전망』 1998년 가을호).

13) 톰 네언,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민족문제』, 임지현 역음,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 도서출판 훈겨레, 1986.

14) 국가의 책임성 결여 문제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참조). 오늘날에는 한국 내 미군주둔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권이양,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에서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지를 설득하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저항민주주의의 접근법은 ‘자주성의 상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동원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미군주둔지에 거주하지 않은 여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분단으로 인해 당하는 구체적인 고통을 모두 자주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¹⁵⁾

물론 저항담론으로서 ‘민족’은 비록 그것이 지배담론으로 변화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민족/반민족의 대립을 부당하게 전제함으로써 민족 내의 계급·계층적 차별화는 물론, 민족 내의 소수자문제를 경시하거나 심지어는 억압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의 물질적 실체’를 부인하고 ‘정치적 시민 됨(citizenship)’을 ‘문화적·정서적 공동체’인 민족의 하위범주로 둘 위험이 존재한다. 즉 민족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데올로기나 특정 정치세력의 자민족우월주의, 인종주의적 지배이데올로기로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한 반사적 정립으로서 ‘오리엔탈리즘’, 즉 민족적 억압에 대한 효과적인 대항담론이 아니라 그러한 지배와 논리적으로 같은 덩어리에 걸려서 ‘민족적 억압’을 돌파하는 무기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시민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혈통적·종족적 동일성, 종교적 순수성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심해질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반제민족주의는 한국자본의 해외진출로 인해 발생한 동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한국 내 비정규직노동자의 억압과 차별로 동시적으로 현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족’ 내에서 정치적·사회적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노동자, 여성, 재외국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살피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15) 정유진, 「민족의 이름으로 순결해진 딸들?」, 『당대비평』 2000년 여름호.

90년대 시민담론과 시민운동은 단순히 국가와 제도를 용인한 타협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견지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민족담론이 갖는 이와 같은 추상성을 극복하면서 그 공백을 메웠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지지를 얻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반미 혹은 통일 문제는 자주성 상실을 만회한다는 추상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인의 삶의 기반,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노근리문제를 비롯하여 미군기지 반환건, 매항리문제,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문제, 미군기지 주변 오염물질 방출문제 등 주민운동·인권운동·여성운동 차원에서 미군주권에 의해 초래된 문제들도 이러한 시민운동적 문제의식을 깔고 있는 평화운동의 틀에서 재정의되면서 대중적 지평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⁶⁾

4. ‘시민적 권리’의 한계와 ‘민족’

그렇다면 시민적 권리는 민족적 차별과 억압을 포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인가? 앞의 반제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민권리의 담론과 실천 역시 동일한 한계를 안고 있다. 그 한계는 바로 ‘시민’ 혹은 ‘권리’는 모두 국가 내에서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기업지배 (corporate governance)가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오늘의 지구 정치경제질서 하에서는 민족정체성은 물론 시민적 정체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 혹은 민족 구성원인 ‘시민’이 당하는 고통의 차원에서 민족문제를 접근할 경우 민족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놓칠 위험성이 있다. 시민사회를 단순히 국가와 대립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시민사회와 국가

16) 평화리는 개념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될 경우, 그것은 단순히 한국민족과 미국의 관계로만 설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군이 주둔하는 근본적인 배경, 즉 자본주의 정치경제, 미국의 패권주의, 갈등과 분쟁의 차원으로 문제를 승격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우익적 평화운동처럼 자신의 전쟁피해만을 부각시키면서 보편성을 상실할 위험성도 있다.

의 동시적 존립기반인 시민사회의 정치·경제적 규정성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와 시민권들이 적용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지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세계국가, 세계시민사회가 실재하지 않는 현재의 조건에서 시민적 권리는 주로 국가에 의해 보증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과 그것의 제도적·물리적 형태로서의 국가의 중요성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군범죄로 인한 당사자와 주민들의 피해,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출로 인한 피해 혹은 남북한의 군사대치상황에서 초래된 이산가족문제 등은 결국 미국과 한국의 ‘특수관계’,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의 구조적 변화,¹⁷⁾ 구체적으로는 냉전적 휴전체제의 변화, “군사적 억제력에 의존한 안보개념의 변화”¹⁸⁾ 등을 통해서만 가시적인 해결의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안보지상주의 혹은 국가보안법체제하에서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도 상실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문제제기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즉 시민적 권리의 확대는 법과 제도의 형태로 구체화되는데 그러한 법과 제도가 자리잡는 곳은 여전히 민족국가일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곧 국가의 주권 혹은 자결권과 동시에 성립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권의 부재는 곧 개인적 권리의 부재를 의미하게 된다. 결국 권리문제는 지배 질서, 다시 말해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지배, 종속관계와 뿔 수 없을 정도로 연관되어 있다.

이미 말했듯이 민족국가의 주권 확보, 자결권 확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권리개념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주한미군문제 등 미군주둔으로 인해 주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민족주의적 요구사항

17) 여기서 한미간의 특수관계란 한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오는 군사·정치적 종속관계를 지칭하며, 남북한의 특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적대 관계인 동시에 유엔에 동시가입한 대등한 국가간의 관계라는 의미이다. 이 두 개의 특수관계는 분단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18) 이철기, 「남북관계, 협력·군축을 풀어야」, 『시민의 신문』 2001. 11. 19.

이지만, 이념적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반미 구호가 북측의 통상적 주장이나 좌파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 때문에 반체제적인 것으로 낙인찍힐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국의 시민운동이 국가 혹은 정치 영역을 괄호로 쳐놓고는, 그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권리개념에는 충실하면서도 정치권력의 문제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계약 및 국가권리 개념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통상적인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 투철하지 않은 채 과거의 현실 영합적 자유주의의 길을 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국가간 자주성과 주권의 문제, 민족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무시한 시민운동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다.¹⁹⁾

예를 들어 일본의 거미줄 같은 주민조직들과 시민운동이 정치적 우경화, 군사대국화 경향에 대해 거의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탈정치화·미시정치화된 시민운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對)아프가니스탄 반테러 전쟁국면에서 국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반테러법안이 통과되는데도 미국의 시민사회가 견제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11테러 이후 반전주장을 한 대학교수가 해직의 위협에 놓이고 언론인이 해고당하며, 테러범을 비공개 군사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는 등 언론자유, 민주주의, 개인의 선택권이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쟁상태에서 미국의 시민사회는 대단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²⁰⁾ 오늘날의 미국에서 전쟁을 빌미로 하여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애국주의 열풍

19)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해방에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여성운동측의 문제제기도 이와 맞닿아 있다. 미국의 보복공격의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해서 탈레반정권의 억압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의 보복공격 개시가 가지는 문제점과 관련해 반전평화연대운동 토론회에서 다음의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인권, 민주주의 문제가 같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그 이전에 국가주권의 문제가 먼저 제기되어야 하며 아프가니스탄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을 두 배로 증폭시키고 있다.”(『시민의 신문』 2001. 11. 17)

20) J. Shattuk, “Required: Human Rights Everywher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1. 12. 28.

이 냉전체제하의 한국에서는 50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²¹⁾

한국은 독일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도 스펜서(Spencer)가 분류한바, 산업형이면서 군사형인 사회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²²⁾ 이 경우 파시즘과 군사독재를 경험한 권위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미성년으로 본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다렌토르프(Dahrendorf)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주의가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즉 이런 조건에서는 법치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법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안보위기, 전쟁과 같은 국가·민족적 이슈가 압도하게 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되기 쉽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치적·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적 과제는 결코 충분하게 성취될 수 없다.

이는 형식상의 보통선거권은 존재했지만 정상적 시민(양민)과 비시민(빨갱이 혹은 연좌제에 묶인 사람들) 간에 엄격한 차별이 존재했던 지난 시절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 그리고 최근의 수지 김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좌경시비, 색깔시비로 걸고넘어지면 가족이 파탄되고 사회적 시민권 자체가 차단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 오늘날에는 시민(중간층 이상의 존재)과 제2등시민 즉 비정규직노동자와 여성으로 신분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²³⁾ 물론 못사는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 한국사회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도 한

21) 필자는 전쟁의 정치 혹은 전쟁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을 조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낮은 시민의식,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억압적 권력에 대한 공포와 그러한 한계 내에서의 현실 영합적, 편의적 삶의 방식의 선택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론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 시민사회이론은 반복하는 데 온 정력을 바쳤다 (김동춘, 『국가폭력과 사회계약』, 『경제와 사회』 1997년 겨울호; 『전쟁과 사회』, 참조).

22) 랄프 다렌도르프, 『분단독일의 정치사회학』, 이종수 옮김, 한길사, 1986, 73쪽.

23) 노동자를 제2등시민으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시민사회의 공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자는 한국에서 노동자는 아직 제2등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의 국민과 비국민 혹은 시민과 비시민으로 이분화되었던 냉전적 차별화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김동춘, 『20세기 한국에서의 '국민'』, 『창작과비평』 1999년 겨울호 참조).

국에서 ‘법의 지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법의 지배의 한계는 바로 국가와 국민의 기본관계의 틀, 더 나아가 국가가 다른 국가(미국과 북한)와 맺고 있는 ‘특수관계’——주권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20세기적 민족문제의 유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하 독일과 일본의 국가주의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신화화’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쟁체제로서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이다. 국가가 신화화되면 개인은 국가에 일방적으로 충성을 맹세해야 하며, 권력의 행사는 시민사회·시민운동에 의해 쉽게 제어되지 못한다. 이 경우 국가는 중립적 존재라기보다는 거의 인격화된 신으로 부각된다. 국가는 시민사회 전영역에 대해 통제권을 갖는 절대권력체가 된다. 즉 과거 냉전시절처럼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회적 신뢰 혹은 사회적 관계가 실종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은 시민운동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민적 자각, 시민참여를 막는 실질적인 배경이 된다.

분단된 한국에서 냉전체제의 피해주민이 감당해 온 고통의 지수는 여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와 비할 바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형식적인 시민권은 보장되어 있으나 수많은 공식적·비공식적 제약들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사회에서 시민권,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이 존재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이것은 한편으로 정치세력의 극도의 불균형, 즉 사실상 단일정당의 50년 독재를 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특수관계와 남북한 특수관계(민족문제)는 이러한 자유권, 민주적 대표성과 같은 차원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권리, 특히 노동자와 빈민에 대한 복지, 여성복지, 교육복지를 크게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미국 군수물자 도입의 세계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민족 내부의 적대와 한미간의 정치·군사적 종속의 문제는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특히

복지·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영역이 공공재가 아닌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 판매/구매될 수밖에 없게 규정하는 일차적인 정치적 조건이다. 한국에서 공공영역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능력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재정능력은 국가의 존립목표, 즉 국가가 타국가와 맺은 특수관계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하여 한반도에서 민족문제는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은 물론이고 남한 노동자와 약자의 ‘사회적 권리’ 차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주민복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확충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은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시민사회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즉 한국상황에서는 인근국가들 간의 특수관계(민족문제)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국가의 단층, 사실상 내전상태에 있는 적대국가의 공존으로 인한 정치적 관계의 사회적 관계로의 내재화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시민사회를 민족문제와 분리시키는 것이 실제로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반미/반제국주의론은 민족문제를 오직 정치적인 문제로만 파악하는 한계를 가졌다면, 그에 대한 반정립으로 나타난 90년대의 시민운동은 민족문제를 시민적 영역 밖으로 추방했다는 점에서 그 시야를 좁혔다.

현대자본주의 세계체제하의 민족문제의 뿌리는 자유주의이며, 이는 국가의 주권, 즉 민족공동체를 정치공동체로 완결시키려는 운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회(society)가 사실상 국가와 동일한 영역을 포괄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회가 국가를 무시하고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시민운동이 국가·정치권력·국제정치·국제경제를 괄호 속에 넣을 때 그것이 도달할 지점은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셈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반도에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독립된 주권국가가 탄생하는 ‘급진적 자유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시민적 권리, 법의 지

배, 약자의 보호와 적절한 대변(advocacy)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시민의식과 민족주의

인간은 권리를 추구하는 존재이고 집단적 혹은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 동시에,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시민운동은 첫째 측면에, 노동운동은 두번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은 학습과 경험이 요구되고 위험부담이 있을 경우 회피될 수도 있지만, ‘소속에의 열망’은 본능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사회에서 더욱 보편적인 것은 정체성의 추구 혹은 소속에의 열망이며, 민족주의는 바로 이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²⁴⁾ 자유주의 지향을 갖는 시민운동이나, 교과서적 계급론에 집착하는 노동운동은 주지주의 입장에 서서 인간행동의 이러한 요소를 곧 제거되어야 할 성질의 것 혹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고향’으로부터의 강제적 이탈, 굴욕적 억압, 국가의 정치적 위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낯선 도시문화와 산업사회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근원적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가치나 이데올로기, 신앙 대상을 설정한 다음 그것에 상당한 정열을 바친다.

이러한 욕구는 단순히 개인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외곽에 부수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극우정치권력을 창출하고 지배구조를 지탱하는 힘이 될 뿐더러 현대 한국사회에서 최대의 성장산업인 교회를

24) “민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을 개별적인 망각상태로부터 구제해주는 것이다.” (Yael Tamir, “The Enigma of Nationalism,” *World Politics* no. 47, 1995/April, pp. 418~40) 북한이 자신의 정치공동체를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명명하는 것도 민족의 이러한 성격을 연상케 해준다.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민족적 굴욕의 체험, 그로부터 비롯된 열등의식은 건강한 시민의식과 계급의식의 성장을 가로막은 암적인 요소가 된다. 요컨대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에서 나온 과도한 열등의식, 보상심리,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억압자들을 모방하여 그들과 같은 시민권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기 위한 지나친 물량주의²⁵⁾는 모두 제국주의 침략, 정치적 억압, 국가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정신적 상처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사회의 주요 현상 혹은 시민의식이라고 부르는 현상들 역시 진공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는 이와 같은 ‘기억의 정치’, 특히 정치적 억압과 배제라는 경험이 작동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사실상 정치사회에서의 시민의식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식은 표피적인 정치의식의 차원으로만 접근될 수 없다.

한편 민족주의는 단순한 피해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동(大同)의식, 집합자아의식의 표현으로서 언제나 사회운동의 강력한 주체적 동력이 된다. 영국의 지배에 대한 간디의 항거 역시 단순한 시민권리 쟁취운동이라기보다 그 바탕에는 집합적 실체로서 인도사람들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열망이 있었으며, 조선말기 유교적 전통의 지사나 학자들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의 길을 택한 것도 집합적 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중근처럼 서양종교인 천주교로 개종하고서도 “국가를 위해 가족을 잊겠다”는 유교의 가르침을 이토 히로부미 저격행동의 바탕으로 삼았으며,²⁶⁾ 일제의 회유를 물리치고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투쟁을 한 이회영·이상룡·김동삼 등 유교적 지식인이 일제에 그토록 강력하게 항거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힘의 저변에도 역시 유교가 지닌 공공윤리, 즉 개인적

25) 교회의 물량주의, 팽창주의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최형묵, 「육망과 배제의 구조로서의 기독교적 가치」, 『당대비평』 2001년 봄호).

26) 안중근, 『안중근,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기웅 옮겨 엮음, 열화당, 2000, 25쪽.

권리의식이 아닌 집합자아의식으로서 민족주의가 깔려 있었다.²⁷⁾ 이후 친일의 길을 간 근대화론자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였다. 이렇듯 민족주의는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운동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집합자아의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발휘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담론이 ‘민족’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개인’에 집착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더구나 문화 혹은 정치적 현실로서 민족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회’, 즉 사회관계와 사회의식을 분석할 수 없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상징은 곧 소속에의 열정이고 이는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를 병리적인 것 혹은 특수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문화적 현상으로서 민족주의는 곧 인종주의, 종교적 열정, 지역주의 등과도 통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생활세계에 바탕을 둔 정치적 실천에 주목을 한다는 의미이다. 9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유별나게도 요란스럽게 거대담론을 포기하고 미시정치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의 지성이 한국사회의 역사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 역시 그러한 측면이 있다면 시민운동의 실천성이 문제의 근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의 추구 혹은 소속에의 열정을 위기에 처한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위치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곧 시민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고 시민운동이 역전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민은 파편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낮은 시민의식’의 실

27)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96~320쪽.

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90년대 한국의 시민운동은 미성숙한 시민사회 혹은 진공의 시민사회에 진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레드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정치적 수동성, 지역주의와 연고주의로 충만된 ‘역사적 시민사회’와 ‘정치현실’——교회와 향우회, 각종 관변조직이 이미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사회——에 제일 늦게 진입한 신참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이러한 역사적 정치현실에 무감각하다면 과거 80년대의 계급담론이 그러하였듯이, 과도한 서구적 표준에 한국의 시민사회를 뜯어맞추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족주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썸이다.

6. 맺음말

우리 사회에서 시민과 민족 혹은 시민의식과 민족주의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분단체제와 군사정치 현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시민담론의 등장을 진보세력이 자유주의 지배질서에 투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반대로 시민사회·시민운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민족인가”라면서 역사의 창고에 가야 할 개념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구화된 자본주의 질서와 ‘신경제’의 신화는 ‘민족공동체’의 존립을 크게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한반도가 처한 국제정치적 현실은 아직 한반도에 구시대적 민족문제가 엄존하고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오늘의 시민운동이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부정적·퇴영적 측면을 극복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민족 혹은 민족의 정치적 성격 일반을 무시하는 것은 운동의 정치적 목표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치적 현실을 문화적 차원으로 환원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 동안 ‘민족’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면서 성장해 온 시민운동이 일정한 자기반성의 계기에 도달했다는 문제의식 아래서 ‘사회적 현상’으로서 ‘민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발전에 매우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민족문제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맥락에서 시민운동은 도덕적 자원에 크게 의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탈정치적 도덕주의, 정치와 시민운동의 과도한 분리는 시민운동을 무기력한 권리추구운동으로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시민운동의 탈정치성이야말로 바로 한 반도의 압도적 정치적 현실인 분단 및 군사·정치적 대립을 자신의 의제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시민운동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감으로써 80년대식의 반미/반제 자주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족문제를 대중적 의제로 올려야 할 단계에 직면하였다. 군비축소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군민주화 운동,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 등은 민족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적 의제, 즉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의 과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들이다. 이것들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 권력의 감시활동이 궁극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한국만큼 민족문제가 사회적 의제, 시민적 의제로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김동춘(Kim, Dong-Chun)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NGO학과 교수(사회학),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1960년대의 사회운동』(공저) 『한국사회노동자연구』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사회』 『근대의 그늘』 『전쟁과사회』 『독립적인 지성은 존재하는가』.